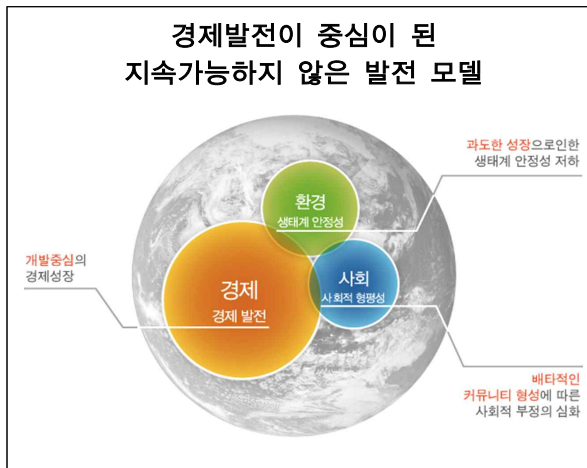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린캠퍼스,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연구소 연구교수 정혜진

### ■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현 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 정의가 7년여 만에 세계적 합의를 이룬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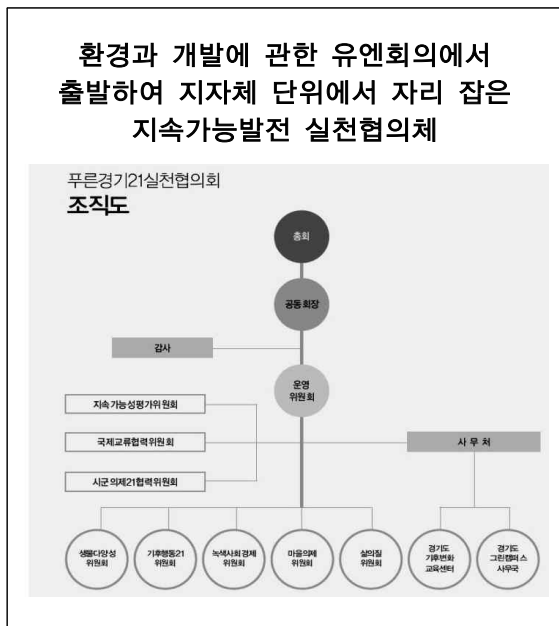
이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개발 중심의 고도 경제 성장이 결국은 환경과 사회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져왔으며, 생태계의 안정성 저해, 사회적 형평성 저하에 따른 계층간 갈등 확산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고, 기존의 성장 일변도 발전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바꾸어야 '말 그대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각 국가에서는 실천적 의미로서 지속가

능한 발전의 세가지 축인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 모델을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각 분야의 노력을 촉구하게 된다.



1992년에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리우선언문과 '의제21 (Agenda 21)'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27개의 원칙을 수립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의제21'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고,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의제21'은 이후 '지방의제21'로 정착되어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으로서 '지방의제21'을 꾸준히 계획하고 실천해가고 있다.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예로 들면, 경기도의 경우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라는 민·관 협력기구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생물다양성위원회 등의 다양한 실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일상 생활에서 목격가능한 지자체 단위의 실천 활동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개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세계적인 선언과 약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이채롭기까지 하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 안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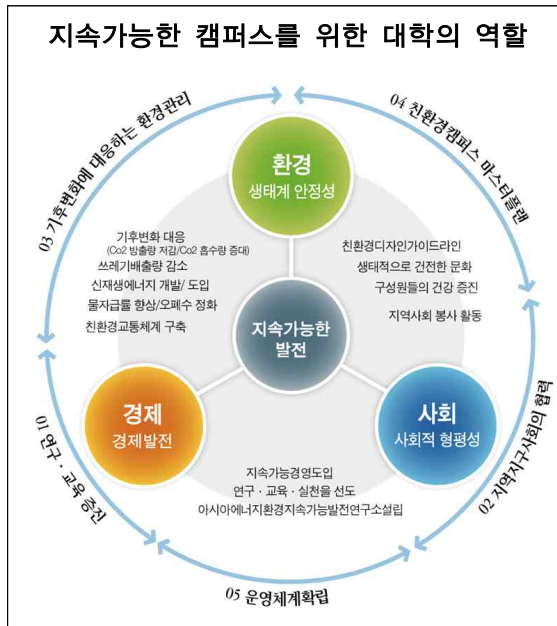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해석상의 논쟁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래세대의 요구’라는 것에 대한 정의, 이를 테면 ‘미래세대는 누구를 혹은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족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인가? 등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요구되는 삶의 질과 그 수준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속가능한’과 ‘개발’은 양립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의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지속가능성의 모호함 속에 갇혀있게 만들며 실천적 해법의 수립 방향과 그것의 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의미 덕분에 전 세계적인 개념 동의가 가능했고, 따라서 이런 개념의 동의를 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두자고 평가하기도 한다. 마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입각한다’는 “원칙”만 정해 놓은 채 그 어느 것도 합의하지 못하는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같은 종류의 세계적 합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도 발생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이와 같은 연유로 많은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의미 중의 하나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는 방법의 실행 체제를 선호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더 선명한 상(象)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폐기물을 줄이는 것과 같이 반 환경적인 것을 억제하자는 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근래 우리사회에서 대두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반환경적인 사례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기체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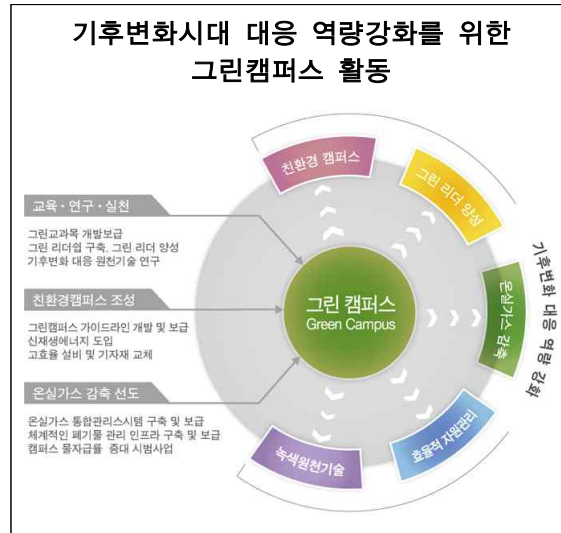
## ■ 녹색성장과 함께 한 우리나라의 그린 캠퍼스

그린캠퍼스는 본래 지속가능한 캠퍼스의 실천적 의미로 특별히 우리나라에 사용된 용어이다. 이 용어가 사용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2008년 광복절에 선언한 새로운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저탄소 녹색성장’ (Low-Carbon and Green Growth) 에서 비롯된다.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캠퍼스 운동은 1990년 22개 대학 총장들이 프랑스의 탈루아르(Tal-loires)에 모여 발표한 탈루아르선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할리팩스선언(1991), 교토선언(1993), 스완지선언(1994), 코페르니쿠스선언(1997), 뤼네부르크선언(2000)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고등교육선언을 통해 볼 때 지속가능한 대학은 도덕적 의무 완수, 공동체 기여, 지속가능한 캠퍼스 운영, 생태소양 증진, 학제적 교육 과정 개발,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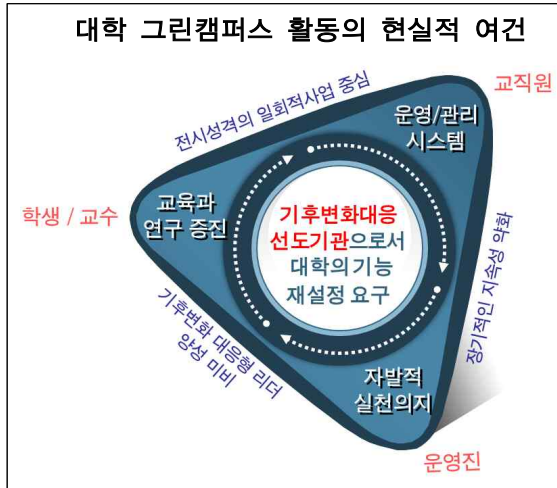
연구 장려, 협력 증진 등의 특성을 갖춘 대학을 의미한다.



## ■ 기후변화 시대, 대학의 도전과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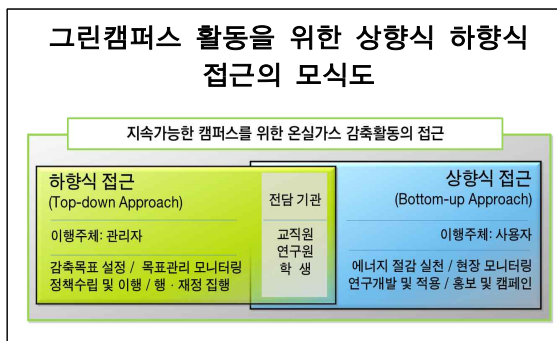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연간 대졸자 50만명에 이르고 도시지역 기준으로 대학 진학률 80%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를 위한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 대학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와 교육의 역할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 경영의 주체이자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캠퍼스 활동은 ‘그린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시설 요소의 친환경 개념 도입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물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개선 부문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속성이 취약한 일회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현실적으로 시설과 인력의 투자를 통해 수익을 재창출하기 어려운 비영리기관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비용의 기술도입과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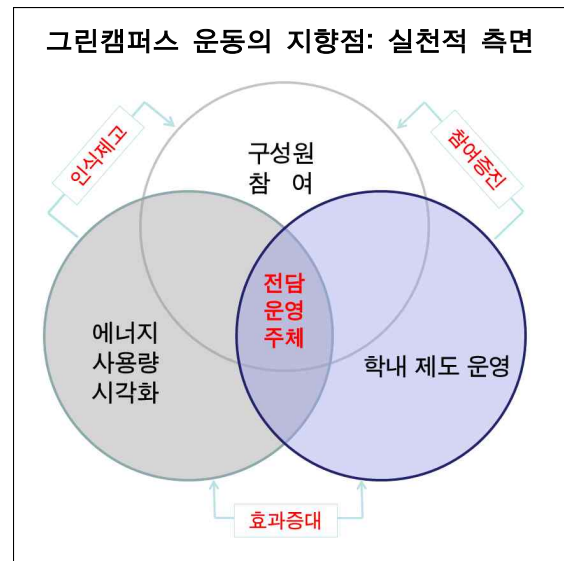


## ■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국내에서 그린캠퍼스 관련 활동이 가시적으로 진행된 지난 5년여의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린캠퍼스 활동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경우에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의 조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향식 체제가 대학 전체를 이끌 만큼 문화적 형태로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상향식 활동은 교원·연구실 단위의 교육과 연구 활동 그리고 학생조직의 단독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은 전통적인 환경경영의 주체와 달리 생산의 주체라기 보다는 소비의 주체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환경 인식과 지식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학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기여라는 책무성에서 출발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5년여의 기간이 지난 지금의 그린캠퍼스 운동은 대학의 내재적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단계 성숙해져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린캠퍼스 운동이 정부주도형 하드웨어 중심의 개선을 넘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학내 제도 운영을 통한 시스템적 접근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배가된다면 그것은 1980년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대학단위에서 이행할 수 있는 실천적 명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한국형 지속가능한 캠퍼스의 모델로서 "그린캠퍼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